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장정욱 선임간사 02-725-7105 jeonguk@pspd.org)

제 목 추모 막고 충돌 유도한 경찰과 정부

날 짜 2015. 4. 20. (총 2 쪽)

성 명

추모 가로막고 충돌 유도한 경찰과 정부 규탄한다 - 폭력집회 매도해 유가족과 추모시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속셈 드러내

1. 지난 토요일(4/18)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1년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예정된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와 ‘청와대 인간띠잇기 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벽으로 온통 거리를 가로막고 경찰력을 동원해 곳곳에 배치했다. 차디찬 거리 바닥에서 참사 1주기를 보내야했던 유가족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찰들의 태도로 인해 시민들의 추모행렬은 가로막혔고, 항의와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를 가로막고 고의적으로 충돌을 유도한 경찰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참사 1주기 행사를 충돌로 얼룩지게 한 책임은 바로 경찰과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이 날 경찰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망각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1만 3천 7백 명의 경찰과 경찰버스 477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과 주변을 완전 봉쇄했다. 그리고 안전을 지켜줘야 할 시민들을 잠재적 폭력행위자로 취급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결한 차벽을 세우고, 국제, 국내 인권기구에서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있는 물대포와 최루액을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들은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경찰이 도리어 불법행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기습적으로 연행하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려했다. 이 날 경찰이 마구잡이로 연행한 수만 해도 유가족 21명 등 시민 100명에 이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제(4/19)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추모방해, 충돌 유도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폭력집회로 매도해 국민들과 유가족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추모시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진짜 책임을 져야하고 사법 처리되어야 할 대상은 추모를 방해하고, 충돌을 유도해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위헌위법한 차벽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훼손한 경찰과 그 지휘부이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민들 앞에 당장 사과해야 한다. 끝.